

美 “한반도 제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백악관 “생산·사용·비축 금지”

“동맹 한국 안보 최우선 고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행동과 대조”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은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번 지침으로 미국은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지뢰 탐지나 제거 등 목적 이외에는 지뢰를 수출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는 파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충분한 정책 검토 끝에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동참하고 있는 대인지뢰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며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서도, 동맹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회의(NSC)도 별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은 오타와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적 비상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국방부는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1993년 이래 재래식 무기 제거를 위해 100여개 나라에 42억달러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러시아군이 대인지뢰를 포함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한반도를 예외로 설정한 것은 비무장

지대의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우리는 한국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며 “오타와 협약에 따르면 지뢰 사용을 돕거나 권장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300만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으며,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건을 제외하고는 1991년 걸프전 당시 마지막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했다.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지뢰를 비롯해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2014년 9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당시에도 ‘한반도 예외 정책’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군에 불이익이라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완화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인지뢰 사용 제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스케이트보드의 날’ 맞은 캐나다 시민들 캐나다 시민들이 21일(현지시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 스케이트보드의 날’(Go Skateboarding Day) 행사에서 한 스케이트 보더의 공연을 구경하고 있다. 스케이트 보더들은 매년 6월 21일 ‘세계 스케이트보드의 날’을 맞아 밴쿠버 거리에서 보딩한다. /연합뉴스

러시아산 원유 수입 늘린 인도·중국

“서구권 대러 제재 효과 반감”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원유 수입을 줄였지만, 인도와 중국이 오히려 수입을 늘리면서 제재 효과가 반감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석유업계의 고위 임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정부 관리들이 수입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원유의 가격 인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강하게 독려 중이라고 WSJ에 밝혔다.

이에 따라 국영 인도석유공사는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와 추가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에너지 정보제공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25배 이상 폭증했다. 6월 들어 인도는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

러시아산 우랄유는 브렌트유보다 최대 배럴당 37달러 싸게 거래돼 인도로서는 자국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정 부분 억제하고,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는 등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의 5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전월 대비 28% 증가하면서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처로 부상했다.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였지만 감축량은 중국과 인도가 구매한 물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NYT는 전했다.

케플러의 빅토르 카토나 분석가는 “아시아가 러시아 원유 생산을 구했다”며 “러시아 원유 생산이 더 줄기는커녕 팬데믹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3~5월 유럽에 하루 평균 55만 4000 배럴을 덜 보냈지만, 같은 기간 아시아에는 하루 50만 3000 배럴을 더 수출했다.

아시아 수출 증가분이 유럽 감소분을 거의 상쇄한 것이다. /연합뉴스

프랑스 법원 “무슬림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중앙정부에 반기 지방정부 패소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을 21일(현지시간) 금지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시가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무슬림 여성이 주로 착용하는 부르키니는 부르카(얼굴까지 모두 가리는 이슬람권의 여성 복식)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이다.

법원은 “종교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규정이 선택적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부르키니를 허용하면) 공공 서비스의 적절한 기능과 이용자에 대한 동일한 대우에 영향을 주면서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위생에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다. /연합뉴스

머스크 “경기침체 대비

석달간 인력 3.5% 감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간)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머스크 CEO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주최로 열린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존 마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국장과의 인터뷰를 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전체 인력의 3.0~3.5%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임원들에게 보낸 ‘전 세계 채용 중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인력 10% 감축 입장을 밝혔던 머스크 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10%를 해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테슬라가 시간제 근로자 수를 늘릴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해고 계획의 영향을 받는 직원은 전체 인력의 3.5% 정도일 것이라고 머스크 CEO는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 전체 인력은 2020년 말 6만9000명에서 지난해 말 10만 명으로 급증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직원의 39%가 공장 근로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머스크 CEO의 언급은 약 6000명의 정규직이 해고 대상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WSJ은 해석했다.

머스크 CEO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규직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빨리 성장했다”며 전체 인력에서 3.0~3.5%의 감축은 “아주 큰 일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테슬라가 다시 채용을 늘려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정규직과 시간제 모두 직원 수가 더 늘어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어린이 백신 접종 현장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부부 미국에서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과 부인 질 여사(오른쪽)가 워싱턴DC의 한 백신 접종소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대입시험 제2외국어 과목에 2025년부터 한국어 포함

오는 2025년부터 홍콩 대학 입학시험(HKDSE)에 한국어가 제2 외국어 선택 과목에 포함된다.

홍콩시험평가국(HKEAA)은 22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젊은이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한국어를 제2 외국어 시험 과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 대입 수험생은 2025년부터 한국어를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함께 제2 외국어 과목으로 고를 수 있다.

홍콩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시험은 한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으로 대체된다.

이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은 홍콩시험평가국과 ‘홍콩대입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활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홍콩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이 매년 3회 시행되고 있으며, 매회 900여명이 응시한다.

현재 홍콩의 대학 중에는 홍콩대에 한국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교양과목이나 부전공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한 대학이 6곳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